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체제 민주당 '작심 비판'

“당내 민주주의, 인질극 벌어지고 있는 상태”

‘연대와 공생’ 학술포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작심 비판했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이 대표가 사당화를 자초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질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진다”며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학술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며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너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인동이 난무한다”고 질타했다.

최근 당 지도부가 ‘표의 등가성’을 내세워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차기 전당대회 규칙을 의결한 데 대해선 “세세한 문제는 깊게 생각 안 한다”면서 “사당화 논란이 있는 것은 아예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가 내년 총선 공천을 불공정하게 할 경우 비명계가 공천확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한 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취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서 주요 내빈들, 시민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최고 책임자가 졌지만 잘 싸웠다고 먼저 규정짓는 것에 경악했다”며 “남탓은 자기 파과다. 참으로 못난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씨가 대통령이 됐던 것이 흥준표씨나, 유승민씨 덕분이 아니다”며 “‘졌잖아’는 패자가 먼저 그렇게 떠드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것이 어그러졌고 더 이상의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대선 평가가 안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 하길래 참새기를 다시 쓰려고 저러나 싶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는 더 나아가 “당내 민주주의, 힘 가진 사람이 그걸 싫어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정책 내놓아도 가려져”
내년 총선 계획에 “문제 의식에 공감하는 중”
제3지대 등에 “충정 충분히 이해... 잘 되길 바라”
尹정부 향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으로 기록”
국정비전·국가경영역량 안보여 과거 헤집는 일만

전부 그런 상태에 놓여있지 않다. 뭔가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여의도를 지누르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란 생각으로 정치를 해 왔고 이제 훨씬 더 잘살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로 말려들어

가고 있다고 제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 사실 적절치 않다. 책임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계획에 대해선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고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3지대나 민주당 혁신계 모임인 ‘일치과상식’과의 연합 행보에 대해선 “상

의하거나 한 일이 없다”, “아직 접촉이 있지 않지만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포럼에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정비전이나 국가경영역량이 보이지 않고 과거를 헤집는 일만 두드러졌고, 생활물가가 폭등해 서민의 등이 휘저어만 정부의 대응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의 끝판은 법치주의 위기로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의심 받는다는 것을 규명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된다”며 “사법시험 합격자가 유난히 많은 정부가 이것도 못 고치면 전부 공범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도내 기초의회 소식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최 예산안 등 총 33건 심의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28일 제 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미 의원),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김순덕·소길영·이종현 의원),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종대 의원)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5분 발언에서 김진규 의원은 신홍정수장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선 의원은 익산시 소상공인을 위한 살아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박종대 의원은 익산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성능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재구 의원은 겨울철 고층 공동주택 화재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조은희 의원은 익산 국립 치유의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오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별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달라”고 말하며 “특히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잘 마련되었는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제시의회,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현장 방문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27일 김제시 상동동 일원의 김제 온천관광지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전 도시과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김제 온천관광지 개발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김제시의회 의원들과 안전개발국장, 도시과장, ㈜스타일드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김제 온천관광지 보수공사는 도시기반 조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김제시가 야심 차게 진행해 온 사업으로, 1995년 김제 온천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해 2001년 개장한 스파랜드가 운영상의 이유로 한 달 만에 부도·폐업하면서 20년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어 온 온천장 시설이 2021년 민간업체에 매각되고 이후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의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며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의원들은 약 50여명의 예산이 투입된 온천관광지의 개발 속도가 더딘 이유와 개장 시기를 연속적으로 미루는 이유 등을 물으며 기 투입 예산의 집행 내역과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질의응답을 이어 나갔다.

사업 현장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 “(주)스타일드림의 세부 계획 실시협약서에 따른 내용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김제 온천관광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더 이상 개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와 (주)스타일드림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의회에도 지속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예산 심사 마쳐

내년 예산안 총 규모 전년보다 1764억 감소 4조5022억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전북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인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5,022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조 6,786억원보다 1,764억원 감소했고, 제2회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 4조9,018억원에서 4,547억원 감소한 4조4,471억원이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도교육청과 13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안을 심사했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심사를 거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들은 27일 계수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됐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총 21건 139억8,198만원이 삭감됐다.

사업별로 보면 △디지털스마트메시 대 설치(10억) △학교정보화기자재보급및관리(15억) △태양광 가로등 설치

(27억) △교육과정지원 과학체험교실 운영(12억) 등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에듀케어(33억)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운영 지원(8억) △인쇄물 제작(4억) 등은 일부 삭감됐다.

교육위원들은 “지금은 긴축재정을 해야 할때라며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재정사업 현장 찾아 현장의정활동

조림초·아트피치마유·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등 방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28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앞두고 재정사업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재정사업 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농촌유학과 아트피치마유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학교인 진안조림초등학교의 현황과 활동상황을 청취하고, 전북 농촌유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어 방문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도민들의 환경성 질환을 예

방·관리하고 생태체험 및 직무연수를 위한 공간으로, 치유센터가 알찬 환경보건교육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진안군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는 내년 12월 개관 예정인 홍삼한방농공단지 내의 문화·복지·편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시설로 관계자로부터 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 장을 둘러봤으며, 센터가 주민과 근로자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건립·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전용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급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만큼 더 꼼꼼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정사업 방문을 계기로 현장을 직접 보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인 만큼 도민을 대변하는 더욱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끝판은 법치주의 위기”

이낙연 전 총리, ‘연대와 공생’ 학술포럼서

‘尹정부 법치붕괴’… 법조 삼륜 공범 국민용납 안해 자유민주주의 발원, 헌법에 대한 오해 또는 무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는 2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여러 위기 의식을 느끼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끝판은 법치주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학술포럼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반 중 법치의 붕괴라는 게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로 세월이 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무슨 고검장이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착시인지 모르지만 법조 삼륜은 안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유난히 많은 이 정부가 이것도 못 고치면 전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조 삼륜이 모두 공범 관계에 있고 부패를 더 기술적으로 더 해 먹는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선 “헌법에 대한 오해나 무지”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북한도 소니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왜 그걸 뺏겼다고 생각하

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과대학 나온 사람은 1학년 때부터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배운다. 그것이 자유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도이거나 무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대한민국 정치에 발을 디더서 활동한 사람 중에 저 만큼 혜택을 받은 사람도 아마 0.1% 이내일 것”이라며 “책임자의 한 사람이로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거기에 저 개인을 위한 어떤 계산을 둔다든가 당파적 생각을 갖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죽을 수년간 정치가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비극”이라면 “옛날에 ‘입금 모르는 게 가장 좋은 정치’라고 하지 않았다. 지금 임금이 누구인지 진절머리나게 잘 아니 제발 좀 잊어주세요”라는 심정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몇 년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며 “늘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을 팔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